

開放化 시대의 농촌 生活改善 사업의 展開 방향

중앙대 산업대 교수
金 成 勳

I. “變化에의 適應”

오늘날 우리 農村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生活改善문제는 더이상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와 같은 ‘고립된 섬’의 日常事가 아니다. 범세계적인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과 범산업적인 商業주의의 확산에 따라 농촌사회 역시 시나브로 세계 경제문화에 편입되고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농촌사회의 변화는 필연 얼마전까지 농촌사회에 고유했던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소멸을 수반하고 공동체적 요소의 붕괴를 뜻한다. 정치적으로 이에 대한 처방 역시 다분히 국제적이고 도시적인 접근 방법이 주된 흐름을 형성한다. 이같은 접근방법은 모든 非물질적인 요소마저 화폐가치(돈)로 표현하는 物神주의적인 접근방법을 뜻한다. 그 결과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엉뚱하게도 과거와 현재의 연계성을 단절당함으로써 더욱 미래의 행방마저 잃게 된다. 특히 국제화와 도시화(산업화)의 추세에 더하여 급격한 민주화의 진전 및 그에 따른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체계의 붕괴로 인해 농촌사회는 이른바 ‘危機’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는 필경 ‘직업과 조직’으로서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독자성마저 그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가치체계 변화가 반드시 농촌사회의 붕괴로 귀결지어질 성질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날로 농촌사회가 몰락해 가고 있는 이면에는 이같은 가치체계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도사업 논리와 방식이 부재하거나 또는 변화에 적응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케 한다. 생활개선사업이건 지도사업이건 교육, 교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아닌

‘變化에의 適應’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만유의 존재를 결정해 온 생존법칙이기도 하다.

다만 적응의 주체가 다름아닌 사람(人間)이며 각종 敎化의 객체 역시 사람이란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이 땅에 뿌리내린 동기를 되돌아 볼 때 새삼 ‘농촌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rural life)’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결정하는 제 변수들, 예컨대 주민들의 소득기회, 그 분배구조, 교육 문화 복지문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지위, 그리고 士氣와 자긍심 등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지난 반세기 절대적인 수준에서 커다란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부문과의 상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 있음을 본다.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농촌경제는 오히려 뒤쳐지고, 상업주의가 팽배할 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고조되며, 민주화는 도리어 불만과 불평을 양산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요컨대, 농촌에 남아 농사를 계속지음으로써 오히려 개별 농가소득이 국민평균 수준에 훨씬 뒤쳐지고, 자녀교육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문화복지면에서 열악한 조건이 현존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농촌지도사업, 특히 생활개선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조건인 장가를 제대로 들 수 없다라든지 그로인해 농촌에 아기 울음이 끊기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서는 장례식 때 상여 땀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 정작 농촌의 주인이며 각종 농업기관과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인 농민의 삶의 질이 이러하고서는 농촌으로부터의 대탈출(exodus) 현상은 오히려 당연하며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빗대어 확대해 온 농촌, 농업관련기관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농촌 주민은 물론 농업관련기관이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적응하는데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II. 새로운 ‘삶의 터’로서의 조건

사람이 어떤 지역을 자신의 ‘삶의 터’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번 소득을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지역내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위의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농촌지역이 바람직한 ‘삶의 터’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위의 두가지 요인, 즉 도시지역과의 균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지역에 못지 않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비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은 비농업부문에 비하여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소비수요 및 생산성의 격차로 인한 소득의 격차가 발생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농경지가 작은 나라에서는 농업만을 통해서 도시와의 소득균형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균형된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의 소득도 올리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어진 입장에서 지역이 그의 주민에게 균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첫째, 농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에게 쉽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농업은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농업이 되어 갈 것이므로 생활중심지는 현대적인 농업생산 중심지로서의 구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농기계의 집결, 배치, 수리, 보관 등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비료, 농약, 종묘, 비닐 등 모든 농용자재의 수급과 농업금융의 조달 등의 서비스가 지역내에서 쉽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산된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농가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품은 유통 및 가공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은 수집, 보관, 등급, 포장 등 유통의 제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며

대량거래의 유리성을 발휘하여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시장정보의 수집, 관리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主·副産物을 원료로 한 가공시설까지 가동함으로써 주민의 소득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외소득은 농외취업기회의 확대에 의한 임금소득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의 취업기회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도시부문의 취업기회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접근편의성(도로, 교통편의 등)이 지역에 갖추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지역이 소득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농촌의 전통적인 『마을』은 주민의 최소한의 기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생활시설들은 의식주와 연관된 일상적 기본생활시설들과 교육, 의료, 문화, 오락 등 생활편의시설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농촌 마을의 기본생활시설은 젊은 사람들이 견디고 지낼만하지 않다. 낡은 가옥, 불편한 부엌, 난방, 화장실 등 주택 부대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상하수도, 오물처리시설 등 어느 하나도 현대인의 감각에 적합한 것이 없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교육, 의료, 문화, 오락 등 재화와 용역은 농촌주민에게는 한층 질 나쁜 것이 더욱 비싼 값에 공급되고 있다. 더구나 농촌의 취약환경 역시 가족노동 중심의 소농경영방식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것이므로 농업이 기계화되고 상업화됨에 따라 불편하고 부적합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설사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서 도시에 못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란 결국 자신의 현재 혹은 장래(자녀를 통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의 형태로 지출될 것인데, 이러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시설이 현재의 농촌마을에는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와의 접근편의성도 너무 열악하다.

Ⅲ. 개방화 시대의 농촌생활개선 사업방향

먼저 21세기의 농촌생활 모습을 실증주의 입장에서 전망을 해 보아야 객관적인 처방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농촌은 30년전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당시의 농촌과 다르듯이 앞으로 농업·농촌 구조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연구객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의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연구기관, 정책 실행기관 모두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농촌주민들을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현재의 농촌을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금의 행정구역상의 구분은 더 이상 실용성이 상실되었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뤄진 농촌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념으로 변화하므로 점차 모든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어가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농촌의 반대개념으로서의 metropolis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통합된 megalopolis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던 點의 개념에서 앞으로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농촌과 도시가 점차 구별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일본이나 서유럽은 이미 megalopolis체제로 돌입하였다. 농촌과 도시의 통합선상의 가속화로 21세기에는 최소한 지역적으로는 거의 통합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에 대한 농촌지도 방향이 재정립되고, 농촌생활개선에 초점을 두고 연구지도하는 생활개선사업의 방향과 과제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 다음에 농업개념 자체가 변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농업자체의 변화과정을 보면 자급자족적 농업생산 체제에서 시장지향적인 상업농으로, 그리고 agribusiness화의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상업농으로의 변화만 강조가 되어 왔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agribusiness적인 면으로의 변화가 주된 관심사항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즉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1, 2, 3차산업이 복합된 산업으로서의 측면이 농업·농촌 문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차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1차산업으로서의 작물의 재배나 가축사양의 농업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오는 원료를 이용하여 저장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더 나아가 무역까지 하는 agribusiness 개념과 이에 더하여 농업에 필요한 생산자재산업, 즉 농기계, 농약, 종자, 비료, 사료의 공급 등 2차산업 개념이 추가되고 나아가서 농업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agriservice의 개념이 더해진다. 농업에 관한 교육, 연구나 진흥청에서 담당해온 연구지도사업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공공적 성격의 agriservice와 민간적 성격의 agriservice도 현대적 농업관련산업의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이런 농업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이 또 21세기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무엇보다도 사회학적으로 농촌가정의 성격과 구성이 달라져 가는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원하던 원하지 않든 농촌가정의 구조가 전체적인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핵가족화가 불가피하다. 가정사회생활의 변화과정을 흔히들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화하였고, 그 이후에는 뭔가하고 의문을 갖는데, 예상컨대 현재는 자녀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는 이행과정에 있지 않나 싶다. 그리하여 자녀 중심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대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농업종사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질적인 면에서도 고령화, 부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10년후를 전망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1993년 현재 정부통계를 보면 농업인구가 54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에 미달이나 이것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시에 가 있는 자녀들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도시에 고용되어 있는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미달한다. 이 통계의 가장 큰 모순은 20~40대의 젊은이가 한 자연부락(마을)당 26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離農은 6공화국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어 연평균 40~50만명에 이르는데 이런 추세로 단순산술계산을 해보면 13년 후에는 농업종사농가인구는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만큼 이농은 심각한 것이다. 현재 5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농가 인구의 42%나 차지하고 여성인구가 51.7%나 된다. 이렇게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가면 농업의 성격이 바뀌지지 않으면 안된다. 영농구조와 패턴이 바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노동의 주가 노년층과 부녀자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농촌지도체계

자체가 남자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여자 중심의 지도사업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남자 중심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인사들이 기존의 농촌지도사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성 중심의 지도층으로 바뀌어야 함을 뜻한다. 농촌진흥청의 핵심간부들도 여성이 차지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더 효율적 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처방은 아니고 변화를 예상해 보는 중이다. 과학기술시대, 정보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이에 농업이 쫓아가지 않으면 아예 쇠퇴해 버리거나 사라지거나 맹장구실 밖에 하지 못한다. 여기서 어떻게 정보와 첨단과학기술을 농업과 농촌생활에 이용할 것인가, 노령층, 부녀자층이 중심이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에 적용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하나의 과제가 된다.

식품소비패턴 역시 生食 위주의 1차상품 중심이었는데, 2차, 3차 상품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게 된다. 70년대 초반까지 식품소비의 목적이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즉 free from hunger의 입장의 소비패턴이라면, 80년대는 영양의 균형유지단계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신선식료품, 동물성고단백질의 공급에 관심이 주어지는데 현재와 미래의 제3단계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즉 가족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성이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비한 새로운 식품개발과 유통이 주 대상이 되겠고,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즉 그들은 소비자이기도 하니까 그것의 소비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주관심이 된다. 제3단계의 소비생활패턴은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식품소비와 더불어 환경을 중시하는 의식구조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생활개선사업도 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켜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환경, 공해문제가 도시의 문제로만 생각했으나 21세기의 우리 농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동안 농민들은 좋은 환경속에 사니까 환경만은 도시사람보다 낫다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우위선을 확보했으나 21세기 농민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파괴되어버린 환경, 마지막 남은 환경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과제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농약공해, 화학제품의 공해문제와 더불어 megalopolis로 바뀌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파괴되어 가는 농촌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함을 뜻한다.

또 하나는 농촌생활개선사업 하면 지금도 서울대 농대를 비롯한 농과대학에서는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육 연구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차원이 달라져서 學際間복합과학(multidisciplinary-science)으로 바뀌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이해하는데서 경제, 정치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거나 혹은 정치, 경제문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분석 접근되어 오던 방법자체가 대단히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농촌이건 도시건간에 경제조건, 정치조건, 환경조건에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소비니즘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공해는 도시에만 있고 농촌에는 없는 것으로들 말하는데, 도시의 공해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촌의 공해는 생명을 앗아간다. 통계에 보면 농약에 의한 사망이 연간 890명(이중 1/3은 자살이긴 해도)인데, 여기에 질병을 더하면 연간 3,000명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부녀화, 노령화로 인한 기계화 추세가 가속화되는데, 이 기계화에 따른 상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누구나 간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운이 없고, 재수 없는 것으로 돌리지만 같은 사고가 도시의 공장에서 생기면 이는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된다. 실제로 농촌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받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겨난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즉 『제도문제』, 산업차원의 제도개선, 기계화에 따른 상해문제 등도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생활을 규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앞의 여러가지 외에도 독과점자본이 농촌에 침투하여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조장하여 그 결과로 농가부채의 주요인을 형성한다든지 상업농화의 급격한 진행과 농산물 수입시장의 개방에 따라 무엇을 심고 기를지 막막하다든지 등 종래의 생활개선사업 영역 밖에 있던 문제들을 분석대상에서 빼놓고 부업을 어떻게 입식부업으로 바꿀 것인가,

농촌의 문화생활, 복지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만 이야기 하는 것은 점차 의미가 없어진다. 다국적 기업지배와 독과점화하에서 농촌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응해 갈 것인가 역시 또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정치문제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조건을 규정하는 중요변수가 되기때문에 생활개선사업의 고려 대상에 빼놓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생활개선사업에서는 날로 줄어드는 농업후계자 인력의 배양문제라든지 교육·의료·복지제도의 개편문제, 노인문제, 농촌주부들의 문화·취미 생활문제, 부녀층 노동력의 확대 참여를 위한 탁아소 운영과 학교 급식제도 확충 및 부녀층의 농업 기계화 훈련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제화시대에 농촌 가정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국한하여 토론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가고 민주화, 지방화에 대한 생활개선사업의 대응은 무엇이냐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의 민주화는 정치면보다 인간화의 면이 중심을 차지한다. 민주화가 보편화된 西歐 산업사회에서 처럼 생활개선사업문제를 물량위주, 효율위주의 분석을 하다보니 인간적 요소가 누락되고 인권문제가 탈락되어 인간 소외현상이 산업사회 농촌에서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농촌 노인, 부녀자의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심리학, 사회학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엄연한 현실인즉, 산업화에서 소외된 것이 농업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것이 농촌이고, 그 중에서 여성과 노인이 가장 크게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대상은 여성만이 아니다. 현재 생활개선문제의 연구자도, 지도사도 여성인데, 앞으로 생활개선사업의 주체, 객체는 모두 성을 초월해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의 실시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시 상업농하에서 여성문제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 기본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의 생활개선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피도, 살도, 혼도 가진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문화적 인간개념이다. 여태까지는 분석연구의 편의상 물량적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경제인)으로 추상화 시키다보니 참 인간이 누락되는 경향이였다. 인간은 경제행위외에도 정치행위

문화행위도 영위하는 존재이므로 농촌여성의 점증하는 역할에 걸맞게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참여는 농촌여성이 주도적이어야 한다.

60년대의 존 벨런 교수는 농촌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upgrading the quality of rural life’라고 하였다. 여기서 도시에 비해 농촌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고 이 격차를 좁히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소득의 향상만을 고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외적인 복합변수의 문제가 된다. 즉 『소득분배구조』, 『문화복지시설 여하』, 『교육의 질』 그리고 『사회 정치 활동에의 참여』 문제인데, 여기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삶의 질에 있어서 농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이 농촌의 질을 결정하는 제도상의 문제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 정책, 행정, 제도개선에서의 참여문제가 대두되며 이런 것도 연구분석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여러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궁지문제』, 즉 만족감을 들 수 있다.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삶에 긍지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본다. 우리 농촌이 부딪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정신적 궁지의 붕괴일 것이다. 즉 일반 농촌환경, 정치, 제도, 다른 조건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농가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부업개량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무리다. 입식부업만 하면 농촌 총각이 장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이제 냉엄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문민정부하의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과제는 이렇듯 막중하다. 이제까지 가정학 차원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예고한다. 새로이 크게 열린 지평선상에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전개방향을 살펴보면서 이 사업의 담당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함을 인식한다. 그 첫번째 순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분야만, 우리 여성만’에서 탈피하여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만 농촌생활개선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생활개선사업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그리고 학제간 접근의 목표는 농촌주민의 광범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중심을 두되 그를 실천시키는 수단이 지도사업이므로 그에 따라 종래의 농촌생활지도체제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남성위주, 기술본위의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 농촌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집단, 어느 기관의 고유분야로만 고집하면 안된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청 전체조직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때이다.

IV. 국제화시대의 가족농 육성 방향

그 단적인 예가 수입개방하의 현단계 우리나라의 상업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이다. 이 또한 농업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될 사안이 아니다. 유통, 가공, 소비자 및 농촌주민의 생활패턴과 밀접히 관련되어 풀어야 할 성질이다.

우선 소농이라는 취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돌려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소농구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역설한 ‘제3의 물결’ 즉 다양한 수요, 개성적인 상품 서비스시대의 소량 다품종생산체제에 부응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수요성격에 맞는 다양한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이다. 외국농산물이 아무리 값싸더라도 수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량수입과정에서 각종 병해충 및 부패방지조치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각과 기호, 건강에 적합한 무공해 농산물은 역시 자기 풍토에서 밖에 공급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유기농업을 보편화해야 한다.

둘째, 원래 농업이란 단순히 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치는 1차적인 생산행위만이 아니다. 그 생산물을 저장, 가공, 수송, 판매하는 것까지 농민의 영역이었다. 요즘의 상업적 농업이 바로 이 뜻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기업, 도시 독과점 자본들에 의해 침식당한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저장판매업을 농어민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원래는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새우젓 담그는 일과 순대, 편육, 떡,

였, 과자 만드는 일은 농어민의 고유업종이었다. 농수축협과 농정당국이 인식을 잘못하여 농어민의 고유분야를 타산업, 타계층에 모두 빼앗기고 이제 수입개방조치로 농수산업의 자체 영역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됐어도 말뿐이지 아직 농어민의 협동조합이 체구실을 못하게 되니 도시 독과점자본이 이리저리 농어민을 지배하며, 농어민의 고유산업분야마저 차지해 들어온 것이다.

셋째, 가격 진폭이 해마다 또는 계절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환금작물에 대한 가격안정대의 운영과 유통구조의 대폭적인 개선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모든 이익금은 유통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특히 채소, 과일, 축산물 등 신선식료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과 유통경로 보장, 그리고 가격지지는 정부만이 아닌 협동조합의 의무이다. 그리고 도시소비자들의 협력과 이해가 절실하다. 열악한 조건의 농촌에 남아 국민들을 위해 힘든 농사를 짓고 있는 댓가를 모두 함께 부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 대중 및 단체와 농민단체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농업이 쇠퇴하면 일차적으로 농민생산자가 몰락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대중의 생존권, 안전성, 건강, 생명, 그리고 생활환경이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들을 한데 묶어 굳건한 공동체 의식하에 농업문제와 도시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을, 소비자는 생산농민의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실천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정부는 하루 빨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도시마다 직장마다 생활협동조합이 구성되어 농촌의 생산자조합과 연결되도록 힘써 주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다시피하는 마당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검사·검역제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직무유기 행위이다. 그 단적인 예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자몽 파동이며 쇠기름 라면 파동, 부산 수입밀 파동이다. 국토방위에 못지 않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방위하는 방역·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임하여 정부는 농업·농촌·농민 살리기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출국들이 자국 농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국 농민을 살리기 위한 국내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점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확고히 하고 UR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UR 타결후에도 위장된 명칭과 방법으로 계속 '자국농민의 국내보호·보조조치를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 보호율이 높은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 캐나다, EC 등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수비형으로부터 공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수출주도의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 가공, 유통정책을 과감히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거국적인 과학기술과 자본투입을 전제로 한다. 수입개방에서 잃은 것을 수출확대로 보상받으려는 적극적인 농정으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여덟째, 무엇보다도 농민생산자들에게 정부가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농민들을 도시민 또는 타산업 종사자와 똑같이 한 국민구성원으로 그 생존과 생활을 보호, 책임질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민들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인양 인식하는 풍조부터 없애야 한다. 그동안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경우든, 어떤 형태로든 농어민의 장래를 국가적으로 보장한다는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 신뢰관계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나머지 대책은 오히려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아홉째, 이제는 싫든, 좋든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 상업농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진입해 있음을 농민생산자들은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학적인 영농, 협동출하, 나아가서 농업생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 및 가공산업에의 참여주체로서 부단한 경제, 과학기술의 연마와 정보의 생활화에 한치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바꿔말해 세계속의 농민, 과학적인 생산자, 장사를 아는 농민, 가공·저장·수송에 능한 협동하는 농민, 나아가서 시장수요변

화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농민, 이것이 비록 험난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오늘날 우리 농민이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농민상이다. 따라서 농민 생산자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유통면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대 소비자들의 기호와 식습관을 제때에 옳게 파악하는 일이다. 소득수준이 높아가면서 핵가족화된 도시소비자들의 식습관구조는 가격문제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신선한 식품, 소량판매, 조리하기에 편리한 잘 다듬어졌거나 가공된 형태를 선호하며, 그리고 연중 고른수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수요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은 여러 갈래의 복합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농산물보다 더 신선해야 하고 농약 공해가 적어야 하며 소규모 포장의 보기 좋고 소비하기 좋은 상품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신선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신뢰성만 인정된다면 더욱 고가로 팔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같은 지역의 농민들이 협동하여 같은 품종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특산지로서의 공동 『상표』를 달고 판매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수확단계에서 깨끗이 다듬고, 소포장으로 공동 규격과 상표를 이용하면 더욱 유리하다. 이 경우 도시의 소비자단체나 아파트 등 밀집주거지역 또는 대량소비처(수퍼마켓, 호텔, 병원, 군대 등)에 공동출하할 수 있다. 단, 공동 규격과 포장과 등급을 채택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럴려면 파종 및 생산단계로부터 수확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포장자재나 규격, 등급 기구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요컨대, 유통시장 속에서도 지배자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질이 높은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가능하다.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점(수퍼마켓 등)에 판매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돼 있다면 공동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어 더욱 유망하다. 유통구조의 장악에 있어 수송수단의 공동이용은 이 경우 필수적이다. 身土不二라는 철학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자기나라 풍토에서 재철에 생산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건강과 생명에 좋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보편화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사는 출향 고향사람들에게 고향 특산물을 사먹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 경지면적이 적은 것을 너무 비판할 필요가 없다. 경영을 고밀도화하면 그만큼 토지면적이 커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자기 고장에 가장 합리적인 식부체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경영규모를 고밀도화, 즉 확대하려면 그만큼 과학지식과 고도기술을 신속, 정확히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별 농민이 해결하기엔 벽찬 과제이기 때문에 인근 지도소와 시험장 또는 대학기관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며 선진지, 선진농가를 국내외 할 것없이 자주 방문하는 계획을 실현 시켜야 한다. 영농기술이란 끝이 없이 개발 향상되는 것이며,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그마한 경지면적과 경영규모일지라도 지레 비판해서는 안된다. 도시소비자의 수요가 소량판매 취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각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 판매과정에 직접 농민생산자가 참여함으로써 이제까지 중간상인들이 차지하던 부가가치를 농민생산자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락 단위 또는 읍면단위로 농민들이 공동저장시설, 가공시설을 설립 운영한다면 저장, 가공과정의 부가가치 역시 농민의 것으로 늘릴 수 있다. 스위스의 낙농농민들처럼 공동으로 치즈, 버터를 만들고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농민들의 부가가치 소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탈리아, 프랑스의 포도생산 농민은 포도주를 집집마다 빚어 소득을 배가한다. 독일의 돼지사육농가들은 부락이 공동으로 햄, 소시지를 만들어 판다. 우리 역시 『한부락 한품목』 이상의 가공식품을 개발할 필요와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토산품이라든지 지방특성을 살린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개발 보급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제 농민이 1차상품만 생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소비하기 쉽고 좋은 「상품」을 만들고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문자 그대로 농사짓고 장사하는 것이 겹쳐진 녹색의 공장(green manufacture) 주인으로 농민생산자들이 거듭나야 한다. 그럴려면 시장정보에 밝아야 하며, 과학영농에 눈을 떠야 한다.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국내외 시장정세를 개별농민들로서는 따라가기 어려울수록 농민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기왕의 농사시험 및 지도기관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농민협동조합을 명실공히 ‘농민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생산부문의 협동생산만이 아니라 유통, 가공사업면의 협동조합 이용이 우선해야 할 때이다. 금융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전부 유통, 가공면의 농민 이익증대를 위해 투자되도록 주도적 역할이 강조된다.

소농경제하에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상품농업』을 확립하며, 유통, 가공사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협동조합이 명실공히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 시장의 개척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공세적인 농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협동조합은 그 선두에 서야 한다.

『○○농협』이라는 상표가 각 특산물과 농산물에 붙여지고, 대도시에 직영 『○○농협 상점』이 개설되고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은 그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총력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 각 농민의 농가마다 “○○농장”, ◇◇농원”이라는 간판이 버젓이 걸리고 그 물건은 누구누구의 농장 것이 아니고는 최고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상품을 생산해 내는 농민조합원이 되게끔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아 농민을 지도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농업정보—그것이 영농기술에 관한 것이든 시장, 유통, 수출에 관한 것이든—를 농민들이 실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때 제곳에 그에 소요한 자재와 금융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이같은 농업대책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제 농촌여성의 역할이 더 크게 발전되어야 한다. 농업대책이 따로 있고 생활개선대책이 따로인 상태에서는 농업·농촌·농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인 용 문 헌

1. 김성훈, 국제화시대의 농산물 유통전략, 한국농업과학협회, 1990
2.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한국 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1. 5
3. 김성훈, 21세기 농촌생활개선사업방향,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991. 7
4. 이두순외 2인, 21세기를 향한 일본 농정의 기본 방향. KREL 1987